

(재)한국출판연구소(이사장 윤청광)는 지난 4월 14일 대한출판문화협회 4층에서 '도서정가제 법제화 시행 1년'이라는 주제로 제34회 출판포럼을 개최했다. 서점들이 출판사가 정한 가격 이하로 책을 판매할 수 없도록 강제된 도서정가제는 시행 전부터 시작해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직 그 논란이 멈추지 않고 있다.

이날 포럼은 한국출판연구소 김종수 부이사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한국서점조합연합회(이하 서련) 이창연 회장, 인터넷서점 알라딘 조유식 대표, 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이하 소시모) 김자혜 사무총장, 문화연대 최준영 정책실장, (사)대한출판문화협회(이하 출협) 정종진 사무국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지난 1년에 대한 토론자들의 평가는 크게 다르지 않았다. 먼저, 도서정가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서점이 10퍼센트의 마일리지와 10퍼센트의 경품행사를 할 수 있게 한 '공정거래법'으로 인해 실제로 인터넷서점은 30퍼센트까지 가격인하가 가능한 점이 지적됐다. 이는 서점들 간에 무분별한 할인경쟁을 야기해 80퍼센트를 차지하는 중소형서점의 몰락을 가속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결국 이러한 가격경쟁은 책값의 인상을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출협 정종진 사무

국장은 "지난해 신학기를 맞아 일부 출판사가 도서정가를 예년에 비해 30~50퍼센트 인상함으로써 신문, 방송은 물론 인터넷을 통한 소비자의 불만이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소시모 김자혜 사무총장 역시 "할인해 줄 것을 미리 엄두에 둔 거품가격은 아닌가?"라는 강한 의문을 제기하며 "남성 양복, 여성 정장을 비롯하여 아파트 분양가격까지 거품가격을 정해 놓고 할인정책을 하는 관행이 출판업계에까지 확산되고 있다면, 문제는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로는 이러한 경쟁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도서판매가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알라딘 조유식 대표는 "불경기 영향도 있지만 도서정가제가 출판시장의 규모를 줄였다"며 "신간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구간에 비해 비싸 독자들이 신간구입을 포기하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말했다. 정가제로 인터넷서점의 매출이 감소하면, 그만큼 중소형서점의 매출이 증대하리라는 것이 입법취지였지만 실제로 소비자들은 인터넷서점에서의 도서매입 규모를 줄였을 뿐 중소형서점으로 발길을 돌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결국 반쪽짜리 도서정가제로 인해 무분별한 할인 경쟁이 지속되면서 출판시장의 침체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책의 콘텐츠 또한 소위 '잘 팔리는 책'들에 집중되고 다양한 종류의 책 출판

예견된 부작용,
그 해법은 무엇인가?



이 힘들어지면서 지식과 문화에 대한 대중들의 접근 자체가 힘들어지게 될 것이라는 우려의 소리가 높았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각기 다양한 주장이 전개됐다. 서련 이창연 회장은 “서점에서 할인이 가능하도록 출판사에서 변칙적인 가격정책을 펴는데 판매업자만 처벌하고 있다”며 “출판업자나 도매상도 도서정가제를 지키는 방향이 되도록 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금의 도서정가제는 시행 후 5년간만 유효한 일몰법日沒法으로 점차 도서정가제 제외 대상이 늘어나게 되어 있어 내년부터 실용서가 제외되며 2007년부터는 초등학교용 참고서가 도서정가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완전 도서정가제만 이 대안”이라고 밝혔다.

그에 비해 알라딘 조유식 대표는 도서정가제의 개선 및 보완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조 대표는 “신간도서의 마일리지와 구간도서의 할인을 제한하면 인터넷서점의 매출은 줄어들겠지만 이미 경험한 바와 같이 소비자들이 중소형서점으로 발길을 돌리지 않아 결국 시장의 파이만 줄어들 것”이라며 “중소형서점이나 출판사의 육성을 위해서 시장을 건드리지 말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우회적인 지원책을 강구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시모 김자혜 사무총장은 “소비자들도 지금의 도서정가제로 인하여 중소서점이 문을 닫고 거품가격의 형성으로 출판업계의 공동화 현상을 가져오게 하는 인터넷서점의 지나친 할인정책을 원하지 않는다”며 “일반서점과 인터넷서점이 서로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고 전반적인 사회의 기조가 자율로 가고 있고 시장경제 원리가 지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출판업계와 서점도 이 원리에 충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화연대 최준영 실장 역시 도서정가제의 개선과 정착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정부, 출판계, 시민사회단체 등이 모여서 토론을 통해 개선 및 정착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최 실장은 “도서관의 시설 및 장서의 확충을 통해 도서관의 이용을 증가시키는 것은 출판계와 창작자, 대중들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며 “도

서관이 도서구입비 증액을 통해 신규도서의 구입을 늘린다면 출판사는 다양한 책을 안정적으로 출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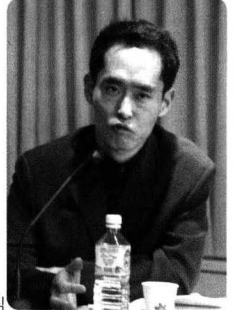
출협 정종진 사무국장은 우리보다 5개월 앞서 도서정가제를 시행한 독일의 예에서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정 사무국장은 “2002년 10월부터 도서정가법을 시행한 독일의 경우 1년이 지나 법의 실행과정에서 입법자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점들이 나타나 도서정가법 적용 예외규정, 할인규정, 교과서 단체주문에 대한 할인규정, 도서 판매 시 다른 상품 및 비용 제공에 대한 규정을 담은 개정안을 마련하였다”며 “어렵사리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도서정가제도 출판·서점업계의 적극적인 협조와 함께 문제점에 대한 법적 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도서정가제 개정 또는 고시(안) 마련을 통해, 도서정가제 할인판매 범위 10퍼센트에 누적점수제도 포함되도록 법적개선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도서정가제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도서정가제 안내센터 설치, 지속적인 홍보 및 안내교육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도서정가제의 완전한 실시가 조심스럽게 제기되기도 했다. 출협 정종진 사무국장은 “과거에 공정거래위원회와 규제개혁위원회 등이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마일리지와 경품을 허용했지만 이제 소비자들이 그 부작용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만큼 이를 없애고 완전한 도서정가제가 가능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알라딘 조유식 대표는 “인터넷서점이 마일리지규제를 찬성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인터넷서점뿐만 아니라 인터넷파크, 홈쇼핑 등에서 책을 판매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인터넷서점만 마일리지를 규제할 경우 오히려 불공정거래의 소지가 있다”고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도서정가제의 법개정이 있을 경우 또 한 차례의 인터넷서점과 중소서점 간의 충돌이 예상된다. 하지만 이번에 소비자들이 어느 쪽 편을 들어줄지는 미지수다. **■**

취재·사진 신동섭 기자



이창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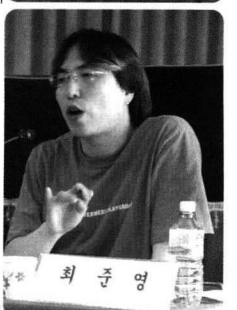
조유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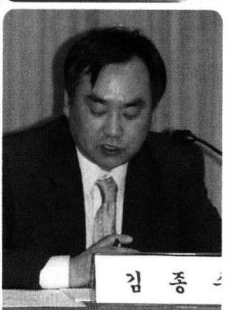
정종진



김자혜



최준영



김종수